

‘광주맛집’ 선정 효과 ‘밍밍’...750곳 중 296곳 ‘폐업’

광주시 17년째 선정했지만 관리 부실...자영업자 ‘매출 등 별 도움 안돼’ ‘오매광주’ 홈페이지 폐업 가게 여전히 계시도...시 “목록 정비해 리뉴얼”

광주시가 맛과 서비스가 뛰어난 음식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며 17년째 ‘광주맛집’을 선정하고 있지만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아 자영업자에게 수입을 늘리고 각종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지정된 자영업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광포털 홈페이지인 ‘오매 광주’에는 이미 폐업한 곳을 홍보하고 있어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선정된 ‘광주맛집’은 총

750곳(중복포함)이다. 이중 현재 문을 닫은 식당은 39.4%(296곳)에 달한다. 세곳 중 한곳이 광주맛집에 선정됐지만 폐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광주시는 관광객과 식도락가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광주맛집’을 지정해왔다.

‘광주맛집’은 미향(味香)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내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맛집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선정한다. 전통 및 향토성, 식재료, 조리방법, 위생시설, 상차림, 서비스 수준 등 음식의 맛과 멋을 두루 갖춘 음식점을 선정한다.

광주시는 선정된 광주맛집에 대해서는 광주시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메뉴별 맛집과 시간대, 이용자, 테마 별로 다양한 미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광주맛집’ 지정패를 배부하고 맛집지도(오프라인)에 등록하는 한편 블로그·맛집 탐방대 운영과 위생점검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맛집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관광 활성화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관광객 발길이 몰려 수입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손님 몰이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대촌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 지난 2월 폐업한 업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차례 광주맛집으로 선정됐지만 선정 이후 손님이 늘지 않았다”면서 “물론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가 겹쳤

다는 점을 고려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보 효과도 별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결국 생계 때문에 폐업을 해야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과거 광주맛집에 선정된 적이 있는 B업주도 “손님중에 광주 맛집을 검색하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을 뿐더러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혜택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광주맛집보다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행정적 지원인 광주 관광포털 홈페이지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폐업을 한 광주맛집들을 아직도 그대로 홍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에

게 혼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 해 다시는 광주맛집을 찾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맛집’ 사업은 광주를 발굴해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관광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가게가 문을 닫는 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내년부터 광주맛집 지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최대 100곳까지 지정하던 맛집을 30곳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광주 맛집에 선정된 가게 중 폐업한 가게 목록을 정비해 오매광주 포털도 리뉴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기 선정부터는 전문가 서면평가(60점) 뿐 아니라 광주 온(ON·40점)을 통해 시민들의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평군수 부인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도 ‘혐의 없음’

이상의 함평군수 부인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이상의 함평군수의 부인 A씨와 전 비서실장 등 2명에 대해 재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받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전과 같이 A씨와 비서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전당장 부부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2021년 5월 함평생태공원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3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A

씨와 전 비서실장을 수사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전당장 부부와 건설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와 전당장 부부, 건설업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A씨 뿐 아니라 이 군수도 양복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3년째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군수를 두차례에 걸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 받아 1년 가까이 수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정선업 병장 44년만에 추모식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본부 지하병거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업 병장의 묘고인 광주 동신고에 심어진 기념식수 앞에서 12일 유족과 동문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민간공원 사업 부당개입’ 전·현 공무원 3명 2심도 무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중제 전 행정부시장과 운영팀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

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무원 B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급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 감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최초 선정 이후 이용성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뒤 과정을 살펴보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급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12 쿠데타 단죄하고 역사 바로 세워야”

5·18기념재단 성명

5·18기념재단이 12·12 군사 쿠데타 44주년을 맞아 “신군부 반란세력을 단죄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12·12에서 5·18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암울한 현대사의 비극을 만든 반란 세력들이 시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12·12 군사쿠데타 희생자, 5·18광주학살 피해자와 유가족은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반란세력은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세력 주요 인사

들은 사과와 증언도 남기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고, 생존자인 정호용, 이희성, 장세동 등도 사과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지난달에는 12·12 당시 제1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가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전두환 2주기 행사를 열고 범죄자 전두환을 비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반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여전히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치욕스런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반란세력이 저지른 만행의 죄과를 낱말이 드러나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치구 체육회 간부에 폭행당했다”

광주시체육회 직원이 고소장

광주시체육회 직원이 ‘자치단체 체육회 간부로 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 A씨가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B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소장에서 “B씨가 지난 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자신의 뺨을 두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B씨를 포함한 일행과 회식을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했으며, 이튿날 오전 카페에서 만나 다툼을 이어가던 중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B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